CEO FOCUS

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바라는

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

2026. 6.

부산상공회의소

〈조사개요〉

본 조사는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바라는 지역 기업인의 정책 의견을 듣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며, 조사 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요기업인 100여명(총 응답기업인 82명)

1 차기 부산 지방정부 1순위 기업정책은?

차기 부산 지방정부가 기업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기업정책에 대해 기업인들은 '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' 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

❍ 지역 주요기업인 100인에게 차기 부산 지방정부의 1순위 기업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, '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' 을 꼽은 기업인이 전체의 32.5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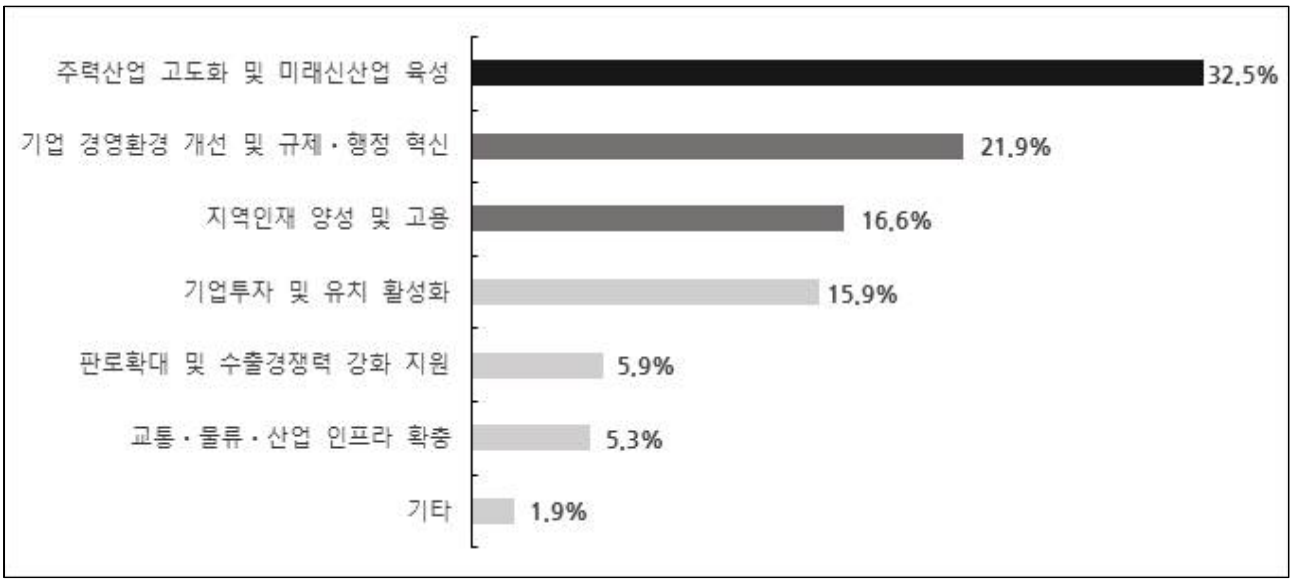
- 이는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및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한 산업현장의 절박함과 신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
❍ 다음으로는 '경영환경 개선 및 규제혁신' (21.9%), '지역인재 양성 및 고용' (16.6%), '기업투자 및 유치 활성화' (15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❍ 반면, 전통적으로 기업의 요구가 높아 왔던 '교통·물류·산업인프라 확충' 을 최우선 순위로 언급한 기업인은 5.3%에 불과

- 이는 신공항, 항만개발 등 그동안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거론되던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
<기업인이 바라는 차기 부산 지방정부 1순위 기업 정책>



2 차기 부산 지방정부 지역 최대 현안은?

기업인들이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현안은 '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과제'와 향후 미래신산업은 물론, 주력산업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'전력수급 및 전력망 확충 사업'

❍ 지역기업인은 차기 지방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지역 현안으로 '해양특화 공공기관 부산 이전'(18.0%)과 '해양데이터센터 설립 및 AI해양경제 허브 구축'(17.4%)을 가장 비중 있게 꼽음

- 이는 해양수산부 이전, SK해운과 H라인해운 본사 이전에 이어 HMM의 부산이전이 확정되면서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도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에 따른 긍정적 시각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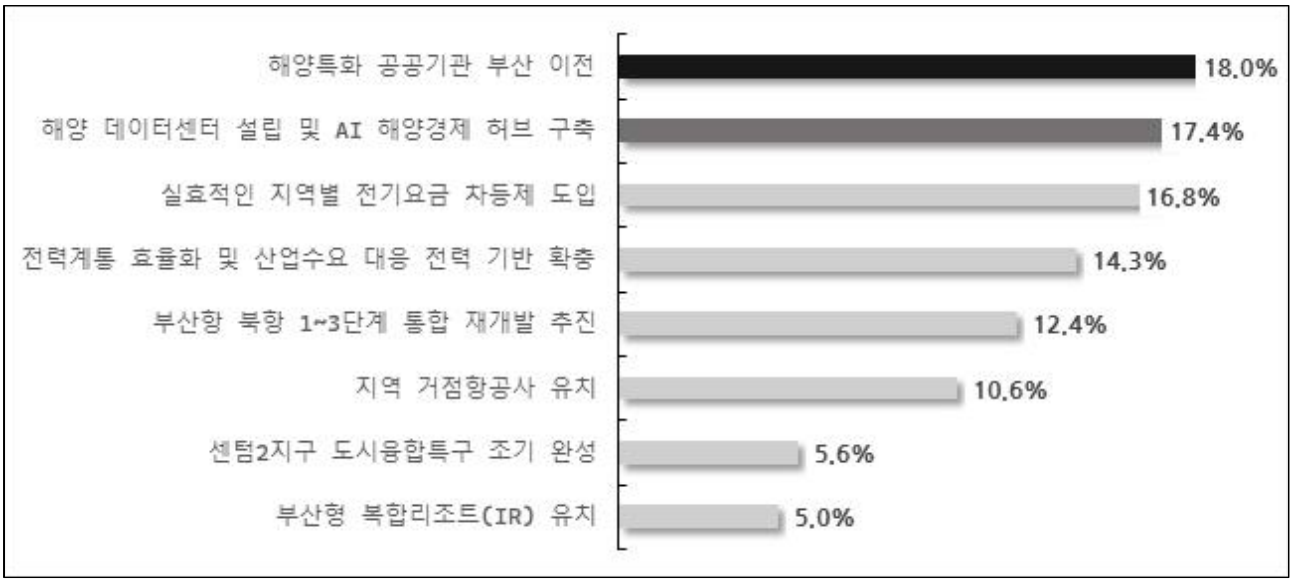
❍ 다음으로는 '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'(16.8%), '산업수요 대응 전력기반 확충'(14.3%)으로 산업용 전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에 차기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함

- 이는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, AI 데이터센터 건립, AX 등 산업용 전력수요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산업현장의 절박함 때문

❍ 반면, ‘북항 재개발’(12.4%), ‘거점항공사 유치’(10.6%), ‘센텀2지구 개발’(5.6%), ‘복합리조트 건립’(5.0%) 등 기존 지역 주요현안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, 기업인들의 현안 중요도 순위에서 다소 밀림

- 이는 이들 현안들이 대체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거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

<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바라는 주요 지역현안>



3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가장 바라는 기업지원은?

기업인들은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'투자인센티브', '금융세제 지원' 등 직접적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원하는 반면, '인력 미스매치 해소' 및 '기업애로 해소'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❍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'투자 인센티브' (23.4%)와 '금융·세제지원' (22.3%)와 같은 실효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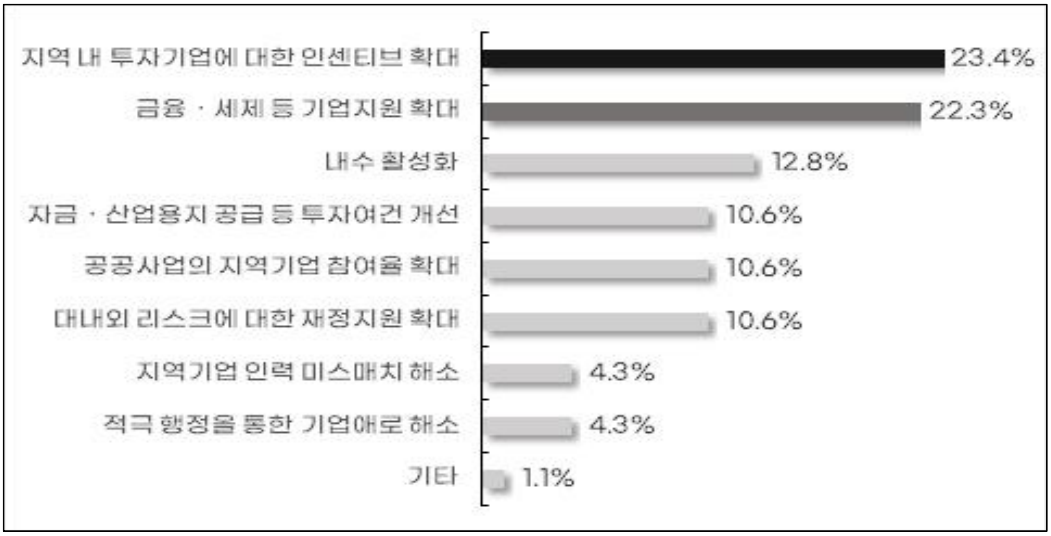
- 이는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, 대미수출 관세,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기업들의 경영부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
❍ 다음으로는 '내수활성화' (12.8%), '자금, 산업용지 등 투자여건 개선' (10.6%), '공공사업 지역기업 참여율 확대' (10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❍ 반면, '인력 미스매치 해소' (4.3%), '기업애로 해소' (4.3%) 등의 지원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- 이는 이들 지원책이 그동안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기대수준이 낮아졌기 때문

<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가장 바라는 기업지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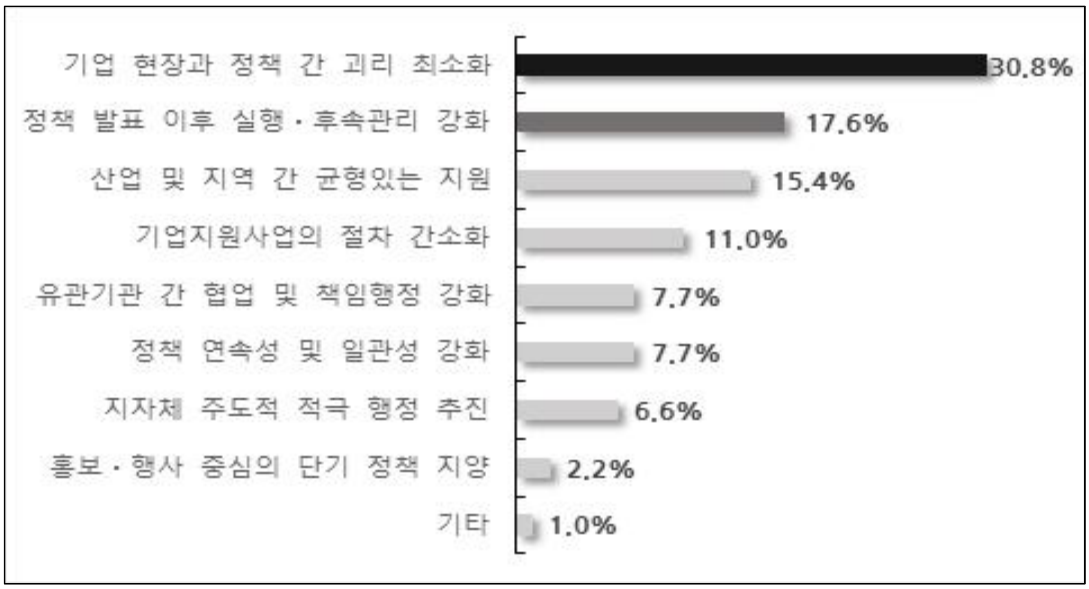


4 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기업정책 핵심 운영 방향은?

기업인들은 차기 부산 지방정부가 기업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할 가장 핵심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'기업 현장과 정책 간 괴리 최소화' 와 '이행 점검 및 후속 관리 강화'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을 요구

❍ 기업정책 운영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'기업현장과 정책 간 괴리 최소화' (30.8%), '이행 점검 및 후속 관리 강화' (17.6%), '산업 및 지역 간 균형지원' (15.4%)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

- 이는 차기 부산정부의 기업정책이 산업현장의 실효적 요구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기업인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보임

❍ 그 외로는 '지원사업의 절차 간소화' (11.0%), '유관기관 협업 및 책임행정 강화' (7.7%), '정책 연속성 및 일관성 강화' (7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차기 부산 지방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핵심 운영 방향>